

# 정기국회에 바란다

## 농업회생을 위한 한농연 국정감사 요구사항

정부와 여당은 쌀협상 국회비준을 8월 정기국회에 처리하려 했으나, 농업회생의 근본적 대책없는 비준강행으로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으며, 또한 이면합의 의혹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 어려운 농업현실에 대한 회생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준 처리만을 강행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후 정부는 7월 14일 ~15일 '쌀대책에 관한 1차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8월 4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쌀 협상 관련 제2차 농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은

공공비축물량 확대, 고정직불금 단가 ha당 130만원 인상, 식량자급을 법제화 등 농업회생을 위한 20대 과제를 선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농민단체 요구안을 핵심과제로 선정, 집중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8월 1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쌀 협상 비준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한 대신 공공비축물량 확대, 부채경감대책, 고정직불제 단가 인상 등 농민단체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농연 등 농민단체에서는 쌀 협상 비준관련 대책이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9월호에서는 정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농업회생을 위한 농민단체의 요구사항 등 시급히 관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해보았다.



## 농업 회생의 근본 대책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

### ▶ 현황 및 문제점

- 쌀 협상 이면합의에 대한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으며, 양자현안을 포함한 쌀 협상 결과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한 대응책 마련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정부와 여권일각에서는 우리 농업 및 쌀산업의 근본적인 회생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국회비준 여부만을 놓고 국익을 논하고 있어, 350만 농민의 절박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 건의사항

- 쌀 협상 국회비준은 정부와 정치권이 국내 쌀산업 및 전체 농업과 농민의 회생을 위한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함. 특히, 구체적으로 법제화·정책화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함

## 농업통상협상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추진

### ▶ 현황 및 문제점

- 쌀 협상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실제 쌀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의무 수입물량 설정을 위한 기준년도의 재조정, ▲수입

쌀 소비자 시판 저지, ▲협상국과의 양자 현안에 관련한 이면합의 반대, ▲쌀 대북지원과 관련한 민족 내부 거래 조항 마련 등과 같은 한농연 및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음

### ▷ 건의사항

- 향후 통상협상에서 사전영향분석, 협상대상국 선정, 협상전략 수립, 협상안 심의·의결, 국내 대책 마련 시 농민참여권 100%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실효성 있는 농가소득안정망 구축

### ▶ 현황 및 문제점

- ha당 약 70만원의 고정직불금은 주요 농업선진국들이 ha당 100만원 이상을 보장해 주는 현실과 비교했을 때 미흡한 수준임
  - 목표가격은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하락되나 고정직불금은 70만원 수준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쌀 농가 소득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 184만 6,000ha 중 밭이 차지하는 면적은 72만 700ha(40%)에 이르고 있어 밭농업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이 요구되나, 현재는 조건불리직불제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실시되고 있음

□ 건의 사항

-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막고 농가소득이 안정되도록 고정직불금 ha당 지원 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함
- 현재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형태의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중인데 발농업 직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면 실시해야 함
- 시장개방 확대로 발작물의 피해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경우 발에 대해서도 생산중립적인 고정형직불제를 도입하고,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보전은 품목별로 변동형직불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한 양곡정책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 올 하반기 생산량 3500만석, 수확기 시장출하량 1,885만석으로 가정하고 공공비축 매입량을 400만석으로 축소할 경우 나머지 115만석은 흡수하지 못할 것임
- 이에 정부는 RPC 등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정부 수매량 감소에 따른 대책을 세울 방침이지만, 2005년 6월 현재 농협 RPC의 단경기 채고 물량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대신해 수확기 수매 물량을 늘려 쌀값 폭락을 방지할 수 있

는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건의사항

- 대북 정세 급변 및 세계 식량위기 등을 대비하여 공공비축 목표를 1천만석 수준으로 늘려 매년 5백만석씩 수매하고 지역 간 가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
- RPC 효율화, 현대화, 규모화 등 민간 유통기능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함

식량자급계획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곡물자급률(식용)은 1975년 79%에서 2003년 51%로 하락하였으며, 사료용을 포함한 자급률은 같은 기간에 73%에서 27%로 하락하였음
- 칼로리 자급률은 2000년 51%에서 2003년 45% 수준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건의사항

-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쌀 자급률의 비중이 약 90% 수준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식량자급계획을 법제화해야 함
  - 전체 식량자급률 : (2003) 26.9% → 35% 이상
  - 사료용 제외 식량자급률 : (2003) 50.9% → 60% 이상

- 쌀 자급률 : (2003) 97.5% → 100% 이상
- 우선 쌀을 포함한 주요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식량 자급계획을 법제화하여 매 10년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수립해야 함

원칙'인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 급식, 무상 급식' 원칙을 관철하고, 이들 3대 원칙에 입각한 학교급식 지원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

#### ▶ 현황 및 문제점

-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소득이 하락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함
-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대다수의 법안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 건의사항

-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함
  - '우리농산물 사용' 규정을 학교급식법 조문에 삽입하더라도, WTO 농업협정에 위배되지 않음
  - 이미 미국 및 일본은 WTO 농업협정 내 '평화조항(제13조)'에 해당되는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여 자국산 농축산물만 공급하고 있음
-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 학교급식의 '3대

### 매년 3백만석 이상 쌀 대북지원사업 정례화

#### ▶ 현황 및 문제점

- 잉여농산물을 대북 지원하면 남한의 입장에서는 과잉농산물 재고를 해소하여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에게는 심각한 식량난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품목의 잉여농산물 대북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함

#### ▷ 건의사항

- 쌀 재고 과잉으로 쌀값 폭락과 관리비용 증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식량 지원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남북통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에 매년 300만석 이상 대북 쌀 지원을 실시하여 남북농업교류를 활성화해야 함

###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 ▶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 이후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본격 추진되면

서 농신보의 대위변제 금액이 크게 늘어났음. 하지만,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출연금은 턱없이 부족하여 농신보의 기본재산은 급감하였으며 추가적인 지급보증 여력 또한 급속히 고갈되고 있음.

- 새로 바뀐 농신보 보증제도는 부분보증 제외한도 축소, 위탁보증 한도 축소, 후계농업경영인 등 선도농업인에 대한 우대보증 축소, 공동경영하는 가족구성원의 보증한도 합산 등의 보증지원심사 강화와 같이 신규보증 요건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음
- 이 때문에 담보물과 연대보증인의 확보가 어려운 일선 농민들은 신규자금의 대출은 물론 기존 자금의 대환이 극히 어려운 실정임. 그리하여 농촌 지역에서는 연체자 발생 등 자금 경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지난 2001년 농가부채대책으로 지원된 상호금융 대체자금 상환기일이 내년부터 한꺼번에 돌아올 경우, 농촌 지역 내 금융대란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음

▷건의사항

- 농신보 정부출연금 비중을 대위변제 대비 100% 이상으로 조정,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농신보의 보증 기능을 조기에 회복시켜야 함
- 2000년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상호금융대체처리 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함

**국내 과수산업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현황 및 문제점

- 중국은 자국산 사과·배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병충해 무발생지역인 해발 1,100m 고지대에 수출용 사과단지를 조성하는 등 까다로운 검역 조건을 통과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중국의 사과·배 생산량은 세계 1위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사과·배와 비교하더라도 품질은 비슷하고 가격이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통과하여 실제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과수 농가의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됨

▷건의사항

- 중국산 사과·배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가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수입 장벽 제거가 예상보다 빨라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수산업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올해 초에 개정된 주세법시행령에 의하면 탁주에 과실, 과채류 첨가할 경우 ‘기타 발효주’로 분류되어 30%의 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산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민속주·

농민주 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MMA 수입쌀을 주원료로 한 현행 민속주·농민주 가공 방식에 머물고 있어, 원래 취지인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처 확대나 품질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

농림부에서 전통 민속주 제조자로 주류 면허를 발급받을 경우 50% 이상을 국내 농산물을 이용해 제조토록 되어 있으나, 국세청에서 주류 면허를 발급받을 시에는 외국 농산물을 사용해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농산물 이용 기피현상이 나타남  
식품안전기본법 정부입법안의 제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음

- 보건복지부 내 사무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원입법안(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발의)의 통과를 위해 식약청장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는 등 식품안전기본법 정부입법안의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음

- 만약 의원입법안대로 보건복지부 내에 사무국이 설치되면 이들 법률을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으로 개정 권고할 수 있게 되어, 농림어업인 관련 규제 방향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

- 특히 농업·어업 부문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식품산업 분야를 잃게 됨으로써, 시장 개방확대에 대응한 농림어업인 중심의 대응력 및 경쟁력

제고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임

### ▷건의사항

- 우선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민속주·농민주의 주세를 대폭 인하하여 지방세로 이양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속주에 대해서는 종량제 제도를 적용해야 함
-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전통 민속주·농민주 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행 72%에 이르는 쌀을 비롯한 국산 곡물을 원료를 이용한 민속주(증류주, 리큐르주로 분류)의 주세를 과실을 원료로 한 민속주 수준(15%)으로 대폭 인하해야 함
- 민속주·농민주에 대한 자유로운 판매가 가능하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을 개정해야 함.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 및 우체국 주문판매, 인터넷 판매 등의 다양한 판로 개척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정부입법안대로 식품안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
  - 국무총리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품안전정책에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 종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입법안대로 식품안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
- 농축산물의 가공 관련 인허가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해야 함



### 농민단체 건의 20대 과제 관련 현황 정리표

농민단체 건의 20대 과제	8월 17일 당정 협의 결과	비 고
① 공공비축물량 확대 : 1,000만석 비축, 500~700만석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비축물량은 FAO 권장기준(연간 소비량의 17~18% 수준)을 감안하여 6백만석으로 함</li> <li>○ 연간 매입물량은 3백만석으로 하되, 2005년에는 4백만석을 매입</li> </ul>	미 수용
②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 60만원/ha → 130만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직불금 단가를 2006년부터 ha 당 70만원으로 인상</li> </ul>	미 수용
③ RPC 지원 강화 : 건조저장시설 확충, 규모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 2005년 50개소, 2006년 110개소</li> </ul>	수용
④ 쌀 자조금 근거법을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계에서 합의할 경우, 쌀 소비 및 홍보 촉진을 위한 자조금 근거 법률을 제정 - 법안 초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음</li> </ul>	수용
⑤ 식량자급계획 법제화 (축산물 포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등 주요 곡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 목표치를 법에 명시하고 구속력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곤란 - 올 연말까지 쌀 등 주요 곡물에 대해 목표치 설정을 추진중 - 목표치를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식량수급과 농지보전 등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부분</li> </ul>	부분 수용
⑥ 불법 수입쌀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수입쌀에 대한 단속을 강화 - 농관원 단속 강화 - 농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추진, 식약청과의 협조기 실시중</li> </ul>	기 실시중
⑦ 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및 유지관리비(2,000억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반 시설 보수·관리 예산을 확충 - 2005년 하반기 농업기반공사 채권 발행을 통해 3천억원을 선투입 - 2006년에는 4,982억원 지원 계획</li> </ul>	수용
⑧ 2001년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상환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환 연기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일시적 대책이므로 수용 곤란</li> </ul>	미 수용
⑨ 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지매입자금, 과수산전전문조직 육성자금 금리인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 - 타 정책자금과의 형평성, 시중 대출금리(5~8%)를 감안 - 농업인 4%, 비농업인 5~5.5%</li> </ul>	미 수용
⑩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신보 정부출연금을 2006년 5,780억원 지원 -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부출연 확대 - 금융기관의 출연 확대 등 자구노력도 강화부분</li> </ul>	부분 수용
⑪ 농지은행제도 조기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은행 제도 조기 도입 - 신규시범 사업 예산 100억원 지원 - 정기국회에서『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금법』을 개정하여 농지은행의 설립 근거를 마련</li> </ul>	부분 수용

농민단체 건의 20대 과제	8월 17일 당정 협의 결과	비 고
⑫ 후계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 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 후계농업인 성공 모델 확산으로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계의 자신감 고취를 도모</li> <li>- 엄격한 평가를 통해 1,500명을 선정, 1인당 8천만원씩 용자 지원</li> <li>- 규모 : 총 1,200억원, 금리 3%</li> <li>- 예산소요 : 이차보전 등에 19억원 소요</li> </ul> </li> </ul>	부분 수용
⑬ 발농업직불제 전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전국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도 14% 이상인 법정리의 밭 18만 7천ha에 대해 ha 당 40만원씩 532억원을 지원</li> </ul> </li> </ul>	미 수용
⑭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전농가로 확대 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을 5ha 미만 농가에까지 확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소요 : 234억원</li> <li>- 시설 미이용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아동수당 신설을 의미하므로 종합적인 검토 필요</li> </ul> </li> </ul>	부분 수용
⑮ 농업협상 통상시스템을 개선하여 농민참여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협상의 주요 단계마다 농민단체 대표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7월 DDA 농업협상시 농민단체 대표 동행하였음</li> </ul> </li> </ul>	부분 수용
⑯ 과수산업종합대책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수립한 과수산업종합대책(FTA 기금 등 2조 5천억원)을 차질없이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 대표브랜드 육성 등 사과, 배 사업 중점 지원</li> </ul> </li> </ul>	기 실시중
⑰ 가공산업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산업 발전대책을 연말까지 마련</li> <li>◎ 식품업무 일원화는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li> </ul>	일부 수용
⑱ 학교 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은 WTO 규정 위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농산물 사용 권장이 반영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li> <li>- 우수농산물 구입은 현행대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li> </ul> </li> </ul>	미 수용
⑲ 친환경농업 인프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친환경농업 예산을 2,018억원 지원</li> <li>◎ 유기질 비료 공급을 2006년 120만톤으로 확대</li> </ul>	일부 수용
⑳ 농기계 구입 보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 공급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보조 지원은 미수용</li> <li>◎ 지역별 농기계 공동이용 임대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을 2006년 18억원으로 확대</li> </ul> </li> </ul>	미 수용